

보도 일시	2023. 1. 27.(금) 조간 2023. 1. 26.(목) 11:00	배포 일시	2023. 1. 26.(목) 06:00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석훈 (044-200-5740)
		담당자	서기관 안준영 (044-200-5745)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댄다

- 해수부, 27일 '제1차 선원정책 혁신 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월 27일(금) 14시 '선원정책 혁신 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노-사 대표와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며, 협의회 의장은 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이 맡게 된다.

* 참여기관(13개)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해양수산부가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해양수산업의 핵심 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국적 선원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적 선원 수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며 약 38,000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1년에는 32,510명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해양수산업 현장에서는 국적 선원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선원들의 급속한 고령화, 청년 선원들의 높은 이직률과 맞물리면서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재난, 전시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가 주요 전략 물자 운송 등 대처 역량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선원정책 혁신 협의체'를 통해 국적 선원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협의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선원 노동시장의 전망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발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각 업종별로 현안과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면서 최종적으로 금년 내 중장기 정책방향인 '선원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노-사와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출 규모 6위 국가이자, 무역량의 99.7%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원은 우리 경제의 핵심 역군이다."면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선원직 매력 증진과 인력군(群) 확대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